민주 "김신조는 걸러내야…"

〈태호〉 〈재민〉 〈현오〉

진수희·이주호도… 이재오·유정복·박재완 합격

인사청문회 파상 공세속 부적격자 선별 고심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하자가 있는 후보자 전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하고 있지만 이 모두를 낙마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일부라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5일 "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투기·병역기피 등 '4대 필수과목'과 '논문표절', 즉 '4+1'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대한다"며 해당 인사들에 대한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박병석 비대위원도 "총체적인 '불법·죄송' 내각"이라며 "지난 10년 기준으로는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전무하다"고 꼬집었고,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인터뷰에서 "이번 청문회는 '의혹·하자 박람회', '사과 청문회'"라고 비난했다.

청문회 대상 10명 중 민주당이 제시한 '4+1' 기준에 걸리지 않은 인사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한 명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더해 유정복 농림식품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등 2명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합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이들 3명의 경우 하자는 있지만 결격 사유까지는 안 된다고 본다"며 "하지만 나머지 인사들은 흠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을 낙마 대상 '0순위'로 거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신·조'(김태호·신재민·조현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특히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철회하든, 본인이 사퇴하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는 답변 태도와 자질 면에서 총리감이 못되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오리발을 내민다. 이런 태도로는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갈 총리로서 부적격자"라며 "김 후보자는 은행법,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배임 등 6~7가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기에 '+α'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 등 나머지 인사 중 2명도 추가 낙마 대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해 26일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27일 본회의에 앞서 낙마 범위에 대한 여야간 물밑 조율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벌써 박 대표가 한나라당 측과 핫라인을 통해 낙마 대상을 조율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의회 4대강 특위, 피켓 시위 국회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이 25일 오전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현장인 광주 남구 승촌보 공사현장을 방문, 공사 현황을 듣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4대강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오섭 의원이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라는 피켓을 들고 4대강 사업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선거비 10억 대출 은행법 위반"

"박연차 연루 의혹 터무니 없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 청문회 공방

여야는 25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게이트' 연루, 선거비용 10억 대출, 스폰서 의혹, 총리 임명제청권 논란 등 각종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김 후보자와 증인들을 상대로 의혹을 집중 추궁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 감싸기에 바빴다.

최대 쟁점인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 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와 박연차 전 회장 간 관계를 추궁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으나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항변했다.

야당은 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06년 경남지사 선거 때 부친과 안상근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명의로 10억원을 대출받아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은 '은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에게 3억원을 빌려준 안상근 전 경남도 부지사가 최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는 대가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선거 때 3억원을 대출받고 가까운 사람에게 총리실 차장직을 보장해준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가 2004년 6월 경남지사 보궐선거 당시 고향 선배인 화성종합건설 최모 대표로부터 선거자금 4억원을 빌린 데 대한 대가성 의혹 등 각종 도덕성 시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특히 이 건설사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 과정에서 경남도청과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 사장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형수인 유귀옥씨한테서 빌린 '9500만원'의 출처에 대해 집요하게 따졌다.

또 다른 스폰서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김 후보자는 도지사 재직 중에 47회 외국에 나갔는데 사적 여행 12회, 배우자 동행 13회, 장남 동행 10회, 장녀 동행 8회 등"이라며 "최소한도로 계산해도 7700만원인데 자금출처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국민은 죄송 총리, 현금 총리, 양파 총리, 떴다방 총리를 원하지 않는다"며 "젊고 참신하다는 이유로 총리 후보가 됐지만, 청문회에서 나타난 김태호 후보자의 모습은 마치 썩은 양파껍질 같다"고 비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는 시종일관 공격적인 자세로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지만 주요 증인들의 무더기 불참으로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청문특위가 증인으로 10명을 채택했지만 출석한 증인은 김재기 전 경남도청 국장 등 4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청문특위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박연차 전 회장 등 3명의 증인에 대해 이날 오후 8시까지 청문회장으로 출석하라는 동행명령권 발동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불합리한 이유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8·8 개각'에 따른 입각 대상자 가운데 문제 있는 인사들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등 도덕적 수준에 맞지 않은 인사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릴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나에게 정식 출범 기회가 있다면, 국민적 시각,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해임건의도 하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 조·이·진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현오〉 〈주호〉 〈수희〉

野 반발 "총리인준도 반대"… 與 "여론향배에 촉각"

'8·8 개각'에 따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청장 내정자 10명의 인사청문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여권으로서는 집권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김태호 내각'의 순조로운 출범이 향후 정국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25일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진수희 보건복지·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 여야간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들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것은 향후 인사청문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7일 예정된 김 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이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정국이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인준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한나라당은 '지명을 철회할만한 중대 결함이 없다'며 인준 강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27일 본회의에서 열리는 인준 투표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인준 투표가 실시될 경우 한나라당의 원내 의석 수(172석)와 한나라당과 합당을 결의한 미래희망연대 의석수(8석)까지 합칠 경우 과반을 훨씬 넘어 인준 통과가 확실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일부 장관·청장 내정자들이 다 한나라당이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이라는 '강공책'을 펴고 있지만, 일부 장관·청장 내정자가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물론 장관·청장 내정자들의 경우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여성대변인 배은희 여의도연구소장 주호영

한나라당은 25일 여성대변인에 초선의 배은희(비례대표) 의원을 임명하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에 재선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특임장관을 내정하는 등 2차 당직인선을 단행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안형환 대변인과 함께 공동 대변인 체제를 이끌어 갈 배 신임대변인은 친이(친이명박)계로 7·14 전당대회 당시 안상수 대표를 지원했었다.

판사 출신의 주호영 신임 여연소장 내정자 역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친이계 핵심 인사로 지난해 9월 특임장관으로 임명됐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인재영입위원장에 장광근 의원, 인권위원장에 성윤환 의원, 통일위원장에 구상찬 의원, 재정위원장에 김철수 관악을 당협위원장을 각각 임명하고, 북한인권위원장에는 이은재 의원을 내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